

G7 프로젝트의 푸른꿈



권 이 혁

〈파종고문／학술원회장〉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되어 있고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런데도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말은 많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주장이 주장을 위한 주장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황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서게 된다. 우리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60%선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일부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제품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핵심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우리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이 길만이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나라살림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 역사는 줄잡아서 20년을 넘는 정도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추진돼야

지난 20여년을 되돌아보면 예상외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고 경제기적을 이루었다고 자찬하게 된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인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의 배경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되는 것은 일관성의 결여라고 하겠다.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에 대하여는 수없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일관성있는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평을 듣기 어렵다. 그런 중에서도 정부가 G7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은 대단히 큰 뜻을 지닌다. 2000년까지는 과학기술의 수준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G7 프로젝트는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이 과제를 어떻게 성취시키느냐가 최대의 현안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 과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나 연구기관의 보조(步調)가 흐트러진다면 지난날의 모순이 반복될 따름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그 사정은 동일하나, 나라의 기본정책이 설정되고 이 정책의 구현을 위해 상기한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이들 사이의 호흡이 맞아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이 말과 같이 쉽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 각 부처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연구사업에서도 이러한 취약점이 쉽사리 시정되지 않고 있다. 새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행정력을 구사해야 한다. 과학기술담당부총리제나 청와대 과학기술특보제를 마련한다는 인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직제도 이번 기회에 확정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명실공히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이다. 그렇다고 연구기관을 통제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연구기관에는 최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일단 정책이 수립되면 이것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율성이 필요하게 된다. 선진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예외없이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현실을 결코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해 서는 안된다.

지난날 모순 반복없게

연구기관의 상호간 협조를 위한 수단으로 산·학·연 협동이 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산·학·연협동체제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근래에 와서 이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경하할 만한 일인데 아직도 본질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산업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

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대학과 연구소사이의 교류가 일반적으로 원활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학교수들이 지나치게 강의시간에 얹매이다 보니 연구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적은 것이다. 물론 대학교수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산·학·연은 하나가 돼야

연구산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또 다른 예로는 연구원들중에 대학교수로 진출하려는 인사가 많다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대학에 자리가 있으면 연구소를 떠나서 대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듣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 지식과 경험을 대학생에게 전수해 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대학에서 일하던 연구소에서 일하던 신바람이 나야한다. 연구산업의 정착은 신바람이 나는데서 이루어진다. 신바람이 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많은 조건의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없이는 결코 연구산업을 정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많은 인사들이 과학기술정책의 부재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정책발표를 해왔다. 어찌 생각하면 정책발표가 지나쳐서 혼란을 가져오는 느낌 조차 주기도 한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의 연구라는 것이 단시일내

에 유용성이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가 계속된 끝에 유용성이나 실효성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니 1년단위 정도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큰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책연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원칙이 더욱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아주 다급한 경우도 있다. 장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촉박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출속을 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경우에 장기·중기·단기연구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질된다면 결국 정책부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예산·인력·시설은 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제아무리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해도 이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되는데 이러한 예는 우리주변에 수없이 많다.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물론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산·인력·시설은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과학기술예산의 확보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지난번 대선에 있어서도 모든 후보가 강조하였다. 이제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이 조건이 착실하게 충족되어야하는 단계에 왔다. 이 조건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체 특히 대기업체에서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R&D투자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관하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안다. 연구개발투자가 없이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우리들은 주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문제에 있어서도 과감한 실천이 요구될 때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양성기관의 시설수준, 교육의 질, 과학기술인 활용문제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근래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제의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보급문

제이다.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라는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렇게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중소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육성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과학기술분야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게 연구인력을 보급하는 일은 대단히 뜻이 있는 것이며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책연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시설분야에 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시설투자는 우선되어야 한다. 특기할 것은 인력양성을 과제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낙후될 경우 그러한 환경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질이 어떠할까에 대하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육과 연구는 직결되어 있으며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세인들은 주지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를 주로 다루고 있는 대학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시설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계획 실천 안되면 「탁상공론」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외에도 연구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해외정보의 정확한 입수를 들 수 있다. 지적소유권문제 등으로 이것 역시 더없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외국과의 공동연구도 이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가 된다. 국책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되풀이하건대 알찬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된 후에는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성취의 생명이다. 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나 정책일지라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